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,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두44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

국내 대표적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분쟁에서 재심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 판정을 하였습니다.

지평 노동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, 강사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,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판정 **취소 판결**을 받아 승소였습니다. 이런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으나 **항소심**에 이어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 상소를 기각하여 **1심 판결**을 유지하였습니다.

[담당 변호사]



김성수 변호사



민창욱 변호사